

# 대체복무, 공공서비스·강한군대 ‘두 토끼’ 묘안 없을까

##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中) 합리적 대체복무

국방부의 대체복무안 마련에 시민단체, ‘또다른 처벌’ 주장  
봉사·경찰근무·치안서비스 등 해외선 非 징벌적 사례 많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교정 시설에 한정하는 정부안이 알려지면서 ‘징벌적 대체복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공공서비스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등 55개 시민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합리적 대체복무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부안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 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에 골자라며 “병역 거부자들에게 또다른 처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체복무의 국제 기준은 현역병의 1.5배다. 심민석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현역병의 2배에 달하는 대체복무를 징벌적 성격으로 규정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9년 프랑스 정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두 배로 정한 점을 비판했다. 유럽평의회도 현역복무의 1.5배 이상인 대체복무 기간



지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회원들이 대체복무 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징벌적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 ◆해외선 공공서비스 주요 ‘대체복무’로 채워

한국에 앞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한 나라들은 수해지역 복구를 포함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대체복무를 인정해왔다.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하기 이전까지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비율이 각 50%였다. 독일의 대체복무 범위는 병원과 요양원, 재해구호와 개발봉사, 해외봉사자와 자원봉사, 경찰근무 등으로 다양했다. 복무 기간은 현역과 같은 9개월이었다. 다만 대안적 대체복무인 재해구호는 6년, 개발봉사 2년, 해외봉사 11개월, 자원봉사 12개월이었다.

그리스의 병역거부자는 비무장 군대 내 복무 또는 사회복무에 소집된다. 비무장 군대 복무의 경우, 무기사용이나 무기 휴대훈련을 제외한 책무만 이행한다. 대

체복무는 우체국 같은 공공기관과 공익 시설에서 이행한다. 비무장 군복무를 포함한 대체복무는 아테네와 테살로니키, 복무자의 출생지나 거주지, 기타 도시지역 소재 기관과 시설은 배제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대체복무한다. 크레타의 만성질환병원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들은 주 7일 근무에 크리스마스 휴가도 없다는 연구가 있다.

대체복무 관할은 국방부가 한다. 전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시 국방부장관이 대체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부대에 소집돼 비무장복무를 수행한다.

그리스의 비무장군대 내 복무는 18개월로 현역 12개월의 1.5배였지만, 나머지 대체복무 기간은 23개월이었다. 지금은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의 유럽사회권

헌장 위반 지적에 따라, 1.5배에 조금 못 미치게 줄였다고 심 연구원은 설명했다.

대안은 대체복무 범위를 크게 치안과 사회 서비스 분야로 나뉜다. 치안 분야는 경찰역과 소방역으로 구분된다. 경찰역은 기동보안과 순찰, 교통보조와 수용소 경비, 교정시설 경비 등이다. 소방역은 재난 시 구조와 환자 처리 등 보조 업무를 맡는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독거노인과 상병 유공자, 심신장애인, 국민 보건 등을 보조하는 사회역 ▲환경 조사와 검사, 자원재생과 수자원 관리, 동식물 보호와 기상관측 등을 보조하는 환경보호역 ▲산간도서 지역의 의료 보건, 방역과 공공 위생 보조업무를 하는 의료역 ▲산간도서 내 학교 교육과 교내 안전 협조, 중퇴생 지도 등을 보조하는 교육서비스역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대안의 대체복무자들은 문화서비스·사법행정·외교·토지측량·경제안전·체육·공공행정·관광서비스 등에서 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

대안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22개월)과 동일하다. 올해 모병제로 전환한 대안은 2021년 대체복무가 사라진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7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와 아르메니아의 대체복무기간은 군복무기간보다 1.5배 길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대체복무 기간을 군복무의 1.5배로 하되, 시간이 지나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되면 점차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보고서에서 “도입 초기에는 현행법상 최장기 대체복무(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기간이 36개월인

점을 감안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감정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36개월 복무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며 “점차 단축하여 군복무의 1.5배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체복무, ‘강한군대’ 만들기 자극

현역 외 전환복무에 속하는 현행 대체복무는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으로 다양하다. 복무기간은 사회복무요원이 24개월,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공중보건의·장병전담의·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은 3년간 복무한다.

문제는 이들 전환복무의 경우 4~9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쳐야 해,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인 ‘집중거부’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기존 대체복무제는 병역법상 병무청이 감독하며,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병무청이 정한 제복을 입어야 한다. 복무 후에는 예비군으로서 집중 훈련을 이어 가야 한다.

대한변협은 보고서에서 “합리적 대체복무의 도입은 이러한(고령화와 사회복지 수요, 메르스 같은 국가적 재난 등) 문제들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군입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재와는 달리, 대체복무가 마련되면 군장병 처우에 대한 개선 및 인권보호를 추진할 구체적인 동기가 마련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군복무의 자발성을 강화해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범종 기자 jaker@metroseoul.co.kr

## 정책브리핑

### 노동부 73개기관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둥구밭’을 비롯한 73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모두 2089곳으로 늘었다.

신규 인증 기관 가운데 17곳(23.3%)은 정부의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 노사발전재단 라오스 취업담당자 초청 연수

노사발전재단은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간 라오스 송출기관과 취업교육기관 담당자들을 초청해 단기연수를 실시한다. 재단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17년에는 재단이 라오스 노동자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2018년 2월 6일부터 라오스 취업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번 단기연수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도 및 외국인력 정책 등에 대한 이해 향상과 유관기관 현장 방문을 통해 라오스 인력출송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및 원활한 송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연수단은 재단 외국인취업교육 참관 및 화성고용플러스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외국인력상담센터, 체류지원, 귀국지원 등 고용허가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 임종석 “일자리 상황에 책임감 느껴... 대책마련 전력”

(대통령 비서실장)

##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남북, 실질적 진전있게 총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인구·산업 구조적 문제 등과 맞물려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지만 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일자리 양과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을 국민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심전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국정과제 추진 일정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성과를 낸다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 함께 나온 정의용 청와

대 국가안보실장은 “남과 북, 북미 간 상호 신뢰 속에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미국과 공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남북 간 합의와 이행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상설면회소 설치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과감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고, 최고지도자가 세계 언론 앞에서 직접·공개적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약속의 전면적인 실천과 이행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이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농식품부,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

정부가 이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채소의 안정적 공급과 김장 비용 경감을 위한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추는 김장 수요가 적은 이달 상·중순 출하조절 시설에 1000톤 상당을 가져장하고 1000톤 상당을 수매 비축해 탄력적으로 방출한다. 또한, 계약재배 물량 4만4000톤을 활용해 김장이 집중되는 시기 공급량을

평년 대비 20% 확대한다.

무는 김장철 출하량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돼 단계적 수매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1만7000톤을 활용한 분산 출하를 통해 적정 가격 형성을 유도한다.

가격이 높은 고추는 정부 비축물량 1900톤을 매주 400톤 상당 방출해 가격 관리에 집중한다.

마늘은 농협 및 정부 비축물량을 통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한다는 방

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할인판매와 직거래를 확대하고 알뜰구매 정보를 제공해 가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상설 직거래 장터와 흡소핑 등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영흡소핑을 통해 특별 판매전도 개최한다.

온라인과 SNS, 스마트폰 앱, 라디오 등 다양한 경로로 알뜰 장보기, 장터, 할인판매 등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대기업 급식 등 대형 소비처에도 가격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세종=최신용 기자